

언론을 통해 본 지역현안과 발전방안

- 2011년 새해 희망을 찾아서

2011.1.31

금 강 일 보

2010년은 어느 해보다 대전지역 자치구들의 재정난이 심각했던 한 해 였다.

동구는 2년여 동안 짓던 신청사 공사 중단사태를 맞았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직원들 월급도 못줄 뻔 했다. 대전도시공사에 내야하는 청소비는 모든 구청이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로 이월시켰다.

경제 침체에 따른 해당 구청의 재정사정 만큼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쉽사리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4년여 전 투기조짐마저 보이며 이목을 끌고 땅을 올렸던 뉴타운사업(도시재정비촉사업)은 차갑게 식은 지 오래고, LH가 맡아 시행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마저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팽창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원도심은 정책적, 재정적 투자를 해도 좀처럼 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신도심 역시 특화되지 못한 채 고령화를 맞고 있다.

이에 금강일보는 새해기획으로 각 구청과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발전연구원 정책협력단과 함께 지역 현안을 찾아 돌파구 마련을 위한 기획시리즈를 연재기로 했다.

/편집자

글 잇는 순서

①동구

원도심활성화와 성숙한 복지

②중구

중앙로재창조 및 문화의 거리

③서구

의료관광도시로 다시 태어나자

④유성구

유성은천관광특구 명성 되찾자

⑤대덕구

산업단지서 생태학습도시로 변화

⑥대덕특구

국내최고 대덕특구를 지키자

①동구

원도심활성화와 성숙한 복지

한창때 마출 ‘반토막’...상인들 마음도 ‘퐁퐁’

<르포>대전 중앙시장을 가다

한낮에도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면서 거리엔 행인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 12일 오전 찾아 간 대전 동구 중앙시장도 날씨만큼이나 퐁퐁 얼어붙어 있었다. 1시간여를 돌아다녔지만 마주친 장손님은 30명 남짓. 그나마 실제로 물건을 사가는 손님은 많지 않았다.

**1시간여 마주친 30여명...물건사는 손님 적어
평일엔 오후에 개점하거나 1주일 반만 열기도
재개발 붐 식은 대전역세권 골목엔 찬 바람만**

#“옛날 반만이라도”

일부 상점은 문도 열지 않은 곳이 눈에 띄었다. 이웃한 상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평일 손님이 없는 곳은 오후에 문을 열거나 아예 일주일의 절반은 문을 닫는 집이 많다고 한다. 순대 등 먹거리를 파는 노점상을 가운데 놓고 열 지어 있는 상점은 한낮에는 손님이 뜸하다. 그 시간에는 점포 주인들이 노점에서 순대에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곤 한다. 한때 노점



▲연일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12일 대전시 동구 중앙시장에서 주인이 진열된 생선을 정돈하고 있다.

과 고정점포 사이에는 상권 등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지금도 앙금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어 노점은 오작교이자 그들을 연결해주는 경계운 까마귀다. 그나마 생선건어물 골목은 종종 손님이 들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제수용품을 장만하려 나온 이틀이다.

종갓집 만며느리라는 김영순(58·서구 관저동) 씨는 “30년 넘게 이곳 시장을 이용하다 지난 추석에는 처음으로 근처 대형마트에서 제수를 장만했는데 이곳만 못했다”며 “가격은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이곳 시장은 원하는 물건이 많은데다 정까지 있어 다시 찾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이곳에서 10만 원 가량의 제수용품을 구입했다.

건어물을 전문으로 팔고 있는 이정구(59) 씨는 “요즘 매출은 옛날 한참 때의 절반도 안 된다”며 “그나마 비가림 시설과 주차시설 등이 확충되면서 몇 년 전부터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어 위안을 삼고 있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인근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런지 먹자골목이 조금씩 활기를 찾아왔다. 또 저녁 장사 재료장만을 하러 나온 식당주인들로 채소가게도 사람들이 발길이 늘어났다.

#“개발이 안되면 풀어주던가”

중앙시장을 뒤로 하고 찾아 간 곳은 인근의 대전역세권 재개발 예정지역. 대전역세권뉴타운개발붐이 일었던 이곳은 언제 그랬냐는 듯 썰렁하기까지 했다. 60년대에서 시계가 멈춘 이 동네에는 폐가로 착각할 정도로 위태위태한 집들이 종종 눈에 띈다. 변한 것이라고는 대전역과 그 뒤로 솟아오른 철도청사 쌍둥이 빌딩 단 2개뿐이다.

이들 건물 뒤로 골목에는 한낮 햇볕 한줄을 쬐이기 위해 어르신들이 양지가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지난 65년 이곳에 들어왔다는 정일수(71·동구 삼성동) 씨는 얼마 전 할머니께서 세상을 뜨서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신다.

정 씨 할아버지는 “뭘 재개발이다 해서 동네 사람들이 잔뜩 들떠 있다가 이제는 모두 거의 포기한 상태”라며 “할멈과 함께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하나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지”라고 엷은 미소를 졌다.

한남희 기자 nhhan@ggilbo.com

“주차난 해소 전통시장 상권 강화 주민참여 늘려 복지사각 줄일 것”

[인터뷰 - 한현택 동구청장]



▲한현택 동구청장

동구 지역은 낙후된 기반시설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침체됐다. 오랜 구민의 숙원인 원도심활성화와 딱딱한 구정살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분야는 구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구는 전통시장 상권 강화를 통해 오랫동안 구민의 숙원인 원도심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지난해 177억 원을 투입해 중부권 최대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주변 상인과 이용 고객을 위해 4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도시장 주차장(30면) 조성에 1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청에 국비지원을 신청해

중앙시장 제3주차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시장 1길(29억 원), 중앙시장 2길(57억 원)에 아케이드를 설치해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 전통시장 활성화가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다.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 공동체가 지역 복지에 참여하는 작은 복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이 지역 복지에 직접 참여하는 복지시책인 ‘천사의 손길 행복+후원회’ 구성을 위한 계획이 이미 수립됐고 올해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대학 졸업생 및 대학원생 등을 학습지원교사로 활용한 교육만두레 학습지원교사를 오는 3월 경 관내 5개 사회복지관에 운영할 계획이다.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희망기움통장 사업 추진, 장애인 일자리 지원, 어르신 건강일자리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

아울러 동구 보훈회관 확충 및 재향군인회관 건립, 대동복지센터 건립, 가양2동 내 흥룡경로당, 가양1동 동부·갱이 경로당 신축 등 복지인프라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런 작은 복지와 함께 복지 수혜자의 탈복지를 유도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시책과 위기 가정 사례관리, 긴급복지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분야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구의 현안인 원도심 활성화와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해 구민들이 희망을 볼 수 있는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겠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주거환경 개선·역세권 개발 시급”

[기고 - 대전발전연구원 동구정책협력단장 장창수 박사]

대전발전연구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단체 및 5개 구청을 중심으로 7개 분야 정책협력단을 구성, 활동 중이다. 그 중 하나인 동구청 정책협력단은 구립 8일 대화장에서 한현택 동구청장이 인사차 참석하신 가운데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구청 정책협력단은 대전발전연구원 장창수 박사를 단장으로 강영주, 이범규 박사 등 연구원 3명과 박 우 대전시 새마을지도자회 회장, 오관영 동구의회 의원, 강양구 한국아동발달연구소장, 김태원 중앙시장 회장, 임종목 동구 행정자치국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간담회는 동구 현황 분석과 발전과제를 발굴하는 자리가 됐다. 동구는 원도심으로 유성구나 서구 등 신도심에 비해 도시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또한 양질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원가치에 비해 활용이 미약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약 70%를 차지, 도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인구는 1985년 33만 7932명에서 20년이 지난 2005년 23만 6054명으로 약 3분의 1인 10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10년에 24만 8929명으로 5년 전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규모는 2010년 기준 2588억 원으로 자립도가 12.2%에 불과하며, 동구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52.6%인 1286억 원을 차지, 복지재정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약한 지역특성에도 불구하고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물류 거점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논의된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는 원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봤다. 즉, 현재 10개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역 중에서 대신지역 1개소만 완료되고, 1단계 공사시행 4개소(석촌2, 대동, 구성, 천동2지역)와 2단계 철차이행 5개소(대신2, 천동3, 소계, 대동2, 구성2지역)는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조정계획 발표에 따라 동구지역 사업구역이 제외될 경우 대전도시공사의 사업 대체 추진 가능성 논의 등 대전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심점으로서 대전역세권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체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의 촉진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원도심과 신도심, 대전시와 세종시를 연결할 수 있는 외곽권 순환도로 개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동부순환도로를 세종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인동시장 5일 장터를 개설 및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구 외곽(하소동)권에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 가능성과 남대전종합물류센터와 연계한 기업 유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대전시에서 현 동구청사의 활용방안으로 국비를 확보,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원동 재래시장조성과 옛 으능정이거리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토의했다.

동구 정책협력단 간담회에서는 이날 논의된 현안과제 이외에 2011년 한 해 동안 고령화시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체계 구축, 문화인프라 확충 및 기반 조성 등의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천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남희 기자 nhhan@ggilbo.com

②중구

중앙로재창조 및 문화의 거리

‘쇼핑 1번지’는 옛말 상점엔 걱정·한숨만

<르포>대전 으능정이·문화의 거리를 가다

네온사인의 화려한 불빛이 수를 놓는 중앙로 밤거리.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변 상인들의 걱정과 시름이 깊이 각인돼 있다.

과거 쇼핑을 하려면 오래 중앙로를 찾아와야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먼 옛 일이다. 중앙로 낮거리의 풍경은 한산하기만 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앙로의 상점들도 업종이 변화하기 시작해 물건을 팔던 매장은 사라지고 유흥업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화려한 밤 비해 낮엔 썰렁...“옛날이 좋았지” 테마거리 조성 ‘기대만’ 주차장 부족 ‘우려반’ 도청이전 앞둔 문화의거리 상인들 불안감 커져

#.기반시설 확충해야

낮에 찾아간 은행동 으능정이거리는 화려한 밤과는 사뭇 달랐다. 과연 이곳이 대전 상권의 1번지였는지 알 길이 없을 만큼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 한파로 인해 얼어붙은 대전천처럼 으능정이거리도 썰렁했다. 그나마 드문드문 있는 사람들 사이로 일찍 문을 연 한 상점주인이 가게 앞에서 한숨을 쉬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 주인장에게 물어보니 신도심인 서구로 손님들이 빠져나갔을 때와 비교하면 조금 나아지기는 했으나 과거 중앙로의 부흥기 시절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고 넋두리를 했다.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충남도청 전경.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전저런 브랜드 매장이 들어섰지만 구매력이 강한 중장년층을 끌어들이는 데는 역부족인 상태다.

공동화를 실감할 만큼 적잖은 회사들과 사무실들이 신도심으로 이전해 밥집의 점심 장사도 영 신통찮다.

상인들은 으능정이거리 가까운 곳에 손쉽게 주차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주차장이 없다보니 중·장년층 고객의 발길을 잡기에 무리라고 입을 모아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시가 중앙로 재창조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으능정이거리에 대형멀티미디어타운을 조성해 특색있는 테마거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상인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소식이지만 이들의 걱정은 다른 곳에 있다.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진수(44) 씨는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는 의견에는 찬성이지만 주차시설과 화장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많은 손님들이 왔다가 불편해서 다시 떠나지 않을까 걱정이야”고 푸념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야”

은행동 으능정이거리를 지나 찾아간 곳은 인근 대흥동 문화의 거리. 이 지역 또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으능정이거리와는 달리 이 지역은 회사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겨울 한파처럼 경기도 얼어붙어 매상이 예년만 못하다는게 상인들의 목소리다.

문화의 거리 상점 10곳 중 2곳은 그럭저럭 연명할 수 있지만 나머지 8곳은 임대료조차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충남도청이 홍성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어 인근 상인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저만 가고 있다.

대전시청과 법원의 이전으로 한파보다 시린 아픔을 겪어 본 터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여기에 서구 관저동 주변에 들어설 ‘유니온 스퀘어’를 생각하면 절로 한숨만 나온다고 한다. 대흥동 장수현 상인회장은 “지금쯤이면 충남도청 부지에 무엇이 들어설지 정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불안하기만 하다”며 “선화동처럼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 예술대학 유치, 복합상가 등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정책이 실현돼 상인들의 불안감을 씻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도청 부지에 문화·예술 특수대학 유치할 것"

[인터뷰-박용갑 중구청장]



우리 중구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대전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둔산동 신도심으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가 초래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충남도청까지 이전하게 됨에 따라 제2의 원도심공동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구는 물론 엄홍철 대전시장과 우리지역 권선택 국회의원까지도 힘을 합쳐 대책마련에 매우 고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언론사인 금강일보사에서 "언론을 통해서 본 지역현안과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특집 연재기획을 마련해 지역현안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구는 오랜 전통과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문화

예술도시로서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와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도심으로 인한 공동화로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로 주변 재창조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공동화를 극복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서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또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는 라스베가스에서 볼 수 있는 대형멀티미디어를 조성하는 등 특색 있는 테마거리화로 예전의 명성을 되찾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도청 이전부지는 대전시와 공조해 역사, 문화, 예술관련 특수대학을 유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정책을 적극 추진해 으능정이거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중앙로 지하상가와 연계한 문화예술 중심상권으로 중앙로를 재창조시켜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젊음의 거리로 조성,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이뤘 내도록 하겠다. 김형중·이성희 kimhj@ggilbo.com

"은행동에 주차빌딩 시급 · 오월드 등 관광코스 연계 필요"

[기고 - 김기희 대전발전연구원 중구정책협력단장]



중구 중앙로는 현재 충남도청과 중구청에서 목적교까지의 구간으로 중구의 핵심 도심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리를 말한다. 은행동의 으능정이 거리와 대흥동의 문화예술거리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지만,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시청의 둔산 이전, 유통경쟁 심화 및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이들 원도심 상권은 현재 매우 위축돼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충남도청 이전이 예정돼 있어 좀처럼 회생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전시와 중구청에서는 중앙로 도심 상점가의 혁신을 통해 원도심 상권을 회복하고 중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로의 핵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재창조와 대흥동 문화의거리 조성 등 중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

중구 전체로는 2008년말 대비 2011년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동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은행동과 대흥동 모두 2009년부터 상업지역은 하락하고 있고 매출액도 감소하고 있으며, 공실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버스노선도 2009년 노선개편 기준으로 중앙로의 경우 36개 노선 456대에서 25개 노선 361대로 감소했다. 유료주차장의 경우 대흥동 상점가지역은 7개지만 은행동 상점가지역은 없으며 무료주차장도 대흥동 상점가지역은 9개이지만, 은행동 상점가 지역은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은행동의 경우 목적교 복원으로 대전천의 하상주차장도 없어져 더욱 불편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앙로 재창조사업을 통해 중구 도심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도심상권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판매촉진과 홍보사업,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제안한다. 물론 상점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후시설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개·보수, 이용객의 쇼핑편의 제공을 위한 필요시설 확충, 상점가 운영 측면의 개선 등이 필요하며, 나아가 상점이 중심의 지역커뮤니티와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주변에 유료 및 무료 주차장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주차빌딩 건립이 시급하다. 또한 현대적인 전천후 쇼핑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으능정이거리 일대 아케이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새로 추진계획인 은행동 멀티미디어 LED 영상거리 조성 외에도 기존에 추진했던 루체페스타 축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영현대화사업으로는 우선 상점이 고유 브랜드로 자체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의 고충처리 및 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을 활용한 판매 및 고객확보를 위해 에브리마켓(Every Market)사업 진입과 함께 상품 배송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상품권 또는 쿠폰을 발행하거나 상인의 의식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현대적인 상인교육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판매촉진을 위해서 우선, 상점이 이벤트 및 축제를 통해 쇼핑과 관광코스가 연계될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한데, 주변 보문산의 아쿠아월드, 오월드 등 관광벨트 가시화에 따라 상점이 이벤트 및 축제를 통해 쇼핑 및 관광코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만남의 장소로 애용되고 있는 은행동, 대흥동 상점가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설치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중 일부 구간에 화방 필방거리를 조성해 인사동거리와 같이 전통이 살아 있는 특색있는 거리로 문화예술의 거리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다면, 문화예술의 거리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연중 문화·예술공연을 상시 개최하고 이와 함께 충남도청 이전부지 교양대학 등 교육·문화기능을 담당하는 거리로 조성한다면, 한층 그 기능이 부각될 것이다. 기타 문화예술의 거리 장소 상품화, 장터 조성 등의 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은행동은 복합상점가로 육성하고 대흥동은 교육 및 문화복합공간으로 상가구조를 개선, 차별화해야 하며, 충남도청 이전 뒤 중구원도심의 활성화의 핵심은 외부고객의 유치에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상권의 육성사업을 통해 새로운 흡입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③서구 의료관광도시로 다시 태어나자

병원은 부족 ... 정책은 ‘미적’

<르포>의료기관 밀집 대덕대로 가보니...

의료관광사업의 풍부한 인프라가 자연스레 조성된 대덕대로. 이 일대에만 크고 작은 의료기관 150여개가 밀집해있다. 이 지역은 어느덧 대전의 의료단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대전시는 조성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 지역에 의료관광사업을 활성화시켜 대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렸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환자들 “접근 쉽고 진료 신뢰” 1일평균 100여명 찾는 병원도 정책 불확실·홍보 미흡 ‘걸림돌’

#.의료관광의 최적 요충지

‘대학병원, 산부인과, 성형외과, 내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 각 분야별로 크고 작은 의료기관이 모여 있는 대덕대로 타임월드 주변. 낮에 찾아간 이 거리 병원과 약국 앞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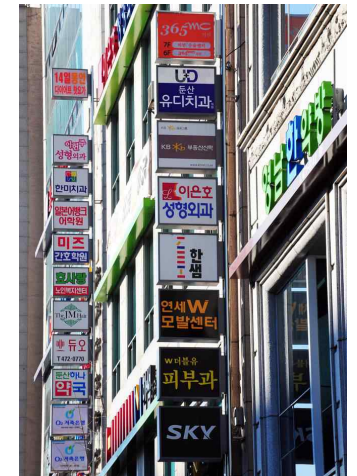
한 약국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부 박 모(55) 씨는 “아프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 주변을 자주 찾는다”며 “무엇보다 가까운 거리에 웬만한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진료 또한 믿을 수 있어 자주 찾는다”고 설명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면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인근 성형외과 병원에는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로 인해 앉을 자리조차 없을 정도였다.

이 병원 관계자는 “하루 평균 100여명의 환자들을 진료한다. 특히 요즘 같은 방학기간에는 진료를 원하는 환자가 평소에 비해 배에 달한다”며 “많은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설 새 없어 걱정이다”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많은 환자와 가족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고향을 방문한 미국국적을 가진 사람도 한 종합병원에서 만나 볼 수 있었다.

근처 종합병원을 찾은 최미애(55·여) 씨는 “젊은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의 경우 보험료도 비싼데다 한국처럼 종합검진을 받을 수 없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오랜만에 고향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덕대로 일대에 각종 의료기관이 즐비해 있다.

방문도 하고 아픈 곳은 없는지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가격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각 분야의 진료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편리함도 갖춰 좋다.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만큼 한 달 정도 쉬다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전의 발걸음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5월 말까지 5개 국어로 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도 대전대학의 위탁운영으로 상반기 교육(1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에 들어갔다.

당초 목표는 50명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지원해 70명을 교육하고 있고, 상반기 교육을 마치면 바로 하반기 교육을 준비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 우려 섞인 현장의 목소리도

의료거리라고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조성돼 많은 환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지만, 대전시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그야말로 걸음마 상태. 즉 의료관광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의 방향 제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덕대로에 비교적 많은 병원이 자리 잡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적잖은 병원들이 몰려 있어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를 걱정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다.

아울러 외국인이 '대전'이라는 도시를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청주공항 활성화, 대전만의 특성화된 의료관광 상품 부재도 의료관광 안착의 걸림돌이다.

장계원 의료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걸음마 단계고, 대전도 지금 첫발을 뗐다"며 "어떤 뚜렷한 방향 제시가 없는 만큼 우려 섞인 걱정도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업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실성을 고려한 정책제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장사 잘되고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 만들터"

[인터뷰 - 박환용 서구청장]



▲박환용 서구청장

희망찬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정부의 경제전망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만, 우리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구의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해결하는 현장행정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코자 한다.

또 큰 도시 명품서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과 약속한 6대 분야 62개의 공약사업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 10대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서구는 누구나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 먼저, 모두가 체감하는 최상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은 물론 복지수혜 계층의 폭을 넓혀 보편적 복지를 실현 하겠다.

장사 잘되고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 방침이다.

이에 구는 2014년까지 매년 2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연말에 고시한대로 계층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2984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민에게 제공코자 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도 오는 3월중 제정할 계획이다.

또 지역여건에 맞는 전통시장 및 상점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기성동 일대에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녹색테마파크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상시 소통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으뜸도시를 만들겠다.

구청장의 현장 및 지역방문을 일상화 하고, 구정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원고와 e-구정도우미 운영에 철저를 기하면서, 구정설명회를 통해 주요구정에 대한 현장 브리핑으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가 서구가 큰 도시 명품서구 건설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비상을 위해 준비해온 시기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계획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선진화된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해외홍보 마케팅 전략 추진해야”

[기고 - 대발언 이재근 서구정책협력단장·정경석 연구위원]

의료관광산업은 일반관광에 비해 체류기간, 지출비용 등에 있어 일반관광의 약 10배에 달할 만큼 부가가치가 매우 큰 산업으로서 지난 2000년대 이후 비교적 낮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태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선점해 왔던 분야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의료수준의 질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버금갈 만큼의 비교우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 전략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 로도 의료관광의 육성을 위한 치열한 경쟁구도가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 대전시도 민선5기 10대 주요공약의 하나로 첨단의료관광 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2월에는 민간 중심의 대전의료관광협회가 출범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8월에는 의료계와 관광계,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첨단의료관광 육성협의회가 발족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대전대학교를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 의료관광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용 중에 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기관 및 유치업체 수도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76개소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전시가 첨단의료관광 도시를 표방하며 의료관광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좋은 개발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의료인프라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물론, 인구1000명 당 병원수가 약 1.3개로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고, 약 1944개의 병원에서 7800여명 이상의 의료진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서구의 둔산 일대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 집적지구로서 약 140여개 병의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의료서비스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 매우 유리한 입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둘째, 우수하고도 편리한 교통접근성을 들 수 있다.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2시간 범위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2012년 말까지 대전역과 인천공항 간 KTX가 직접 개통되면 주행시간도 1시간 20분 내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인근의 청주공항을 통해서도 중국 등의 동남아 환자 유치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셋째는 다양한 관광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온천수나 포도주, 인삼 등을 활용한 수(水)치료나 웰스팜(health farm)운용 등의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의 개발과 인근의 백제문화권 관광자원과도 연계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전시가 첨단의료관광도시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첫째, 선진화된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병의원마다 세분화된 특화 진료 분야의 경쟁력을 토대로 그에 걸맞은 이용자 타겟층을 설정해 역량을 집중시키는 병의원간의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이 요구된다. 즉 중소형 병의원들의 경우 미용 및 성형, 스파, 한방 등의 선택적 치료형 의료관광의 수요에 집중하는 대신, 대형종합병원의 경우는 중증 난치병치료나 장기재활 등의 수술치료형 의료관광 수요에 대한 유치 전략과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 홍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국어 기반의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구축과 해외자매 도시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Agency)들과의 상호협력추진 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대전권 병의원들의 국제의료관광평가위원회(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의 인증 취득이나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전시 첨단의료관광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의

료관광서비스의 산업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 둔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 특화지구(Medical-Street)를 지정,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한편,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R&D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산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의 확충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능한 대덕특구내 첨단의료관광산업단지를 조성, 의료관광 특화지구와 연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첨단의료관광도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화를 위해선 행·재정적 지원노력뿐만 아니라 관련기관과 시민의 애정 어린 관심과 상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우리 대전시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보다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④유성구

유성온천관광특구 명성 되찾자

뜨거운 온천전쟁 ... '색다른 승부수' 절실

<르포>온천문화의 거리가보니

**62개 온천업소 산재 연간 1000만여명 찾아
전국 200곳과 경쟁...“차별화 필요” 입모아
市 추진 의료관광과 연계 ‘시너지’ 모색해야**

유성하면 단박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온천’이다. 온천은 뭘래야 뭘 수 없는 유성의 상징이다. 유성온천의 역사는 정확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지만 백제 때부터 유래가 시작된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전장에서 온몸을 다쳐 돌아온 아들을 위해 약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어머니는 날개를 다친 학 한 마리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에서 몸을 비비고 나서는 바로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아들에게 발라주었고 그러자 아들의 온몸에 나있던 상처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후 유성 땅에 있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은 팔도강산의 구석구석까지 알려져 찾는 이가 끊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유성의 온천역사는 전설 만큼이나 오래됐다. 유성온천의 명성이 예전만 못하다. 여전히 전국구인것은 틀림없지만 방방곡곡에 온천이 개발되며 테마파크다 뭐다 해서 몸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성온천만의 특색 있는 차별화 정책이 그래서 절실하다.



#. 온천문화의 거리

대전 유성구 봉명동 온천문화의 거리에는 온천관광업소가 밀집돼 있다. 이 곳을 기준으로 유성 곳곳에는 62개의 온천업소가 자리잡고 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유성온천의 명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이른 바 ‘웰빙’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 보다 많은 이들이 유성온천을 찾는다고 한다. 도시철도 역시 유성온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무엇보다 두터운 마니아층이 유성온천을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연간 유성온천을 찾는 사람들은 어림잡아 1000만여 명에 이른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지역민을 제외한 수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92년 1000만의 기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인근에서 온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대전사람과 인근 사람을 구별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꾸준히 사람이 많다”며 “온천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홍보가 뒤따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소 주말이면 항상 산행 후 유성을 찾는다는 박 모(55·여) 씨는 “건강을 이유로 매주 유성 주변의 산을 등반한다. 땀을 한껏 흘리고 난 뒤의 사우나는 그야말로 꿀 맛”이라며 “온천이 관절염 등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찾을 때마다 일석이조라는 만족감이 든다”고 말했다.

#. 유성만의 특색 있는 정책이 필요

전국의 온천지구와 치열한 경쟁 속에 지역민을 제외한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성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여기에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온천업소와 접근성이 용이한 호텔 등의 인프라는 그야말로 유성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웰빙’시대에 맞게 관절염, 혈액순환 등 온천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대전시가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의료관광과 유성온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숙제다. 최근 개발된 전국의 온천들이 테마파크화를 추구하며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유성구 관내 3곳의 병원에서 온천수를 활용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의료산업을 활용해 의료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유성온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겠다”며 “앞으로 독일처럼 국가의 보험처리로 온천 요양을 떠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족욕탕에서 시민들이 무료로 족욕을 즐기고 있다.

“온천산업 활성화·내년 온천대축제 준비 만전”

[인터뷰 - 허태정 유성구청장]



온천대축제가 열리는 내년은 유성축제의 새로운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유성온천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침체된 온천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만큼 올해는 2012년 온천대축제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해다.

구는 기존 유성축제에 대한 체질개선을 통해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삼아 나갈 계획이다.

관주도의 보여주기식 동원축제에서 주민이 주인이 돼 함께 참여하고 이끄는 축제로, 먹고 마시는 축제에서 보고 즐기고 참여하는 지역특성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 북적이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온천·문화·대학·유성5일장 등과 연계해 역사와 전통,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추억이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테마축제를 창안할 방침이다.

또 전문가의 자문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존 축제의 누적된 문제점을 진단·보완하겠다.

내년 온천대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제반 상황 준비에 행정력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무원, 주민, 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기획팀, 외국어팀, 학술팀, 의전팀, 홍보팀 등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가동하고, 주변 문화유적과 연계한 온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메인(유성온천.kr)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성공적인 온천대축제를 위해 온천수 이용업소들의 (특)한국온천협회 가입을 확대하고 (사)유성관광진흥협의회의 등 민간단체의 참여유도를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시설을 확보하는 등 장기적으로 의료관광산업과 MICE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침체된 온천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온천 수준의 세계화, 선진화 전기를 마련하겠다.

마지막으로 유성온천은 우수한 성분과 풍부한 유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용이하고 호텔 등 축제를 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전국에서 물러드는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민·관이 하나가 되어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온천수 의료자원화 유성중심 원스톱관광 구축해야

[기고-대전발전연구원 박노동 연구위원]



민선5기 유성구가 역점사업으로 가칭 ‘유성온천관광 재생 프로젝트’를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옛 명성의 회복을 미래지향적 발전에 투자하려는 적극적이며, 타당성 있는 정책의지로 보이며, 향후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

대전시의 쌍크탱크를 자임하는 대전발전연구원 또한 이러한 유성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10년 구성된 유성구 정책협력단을 통해 민선5기 유성구가 어떠한 발전 전략과 지향점을 가져야 하며, 바람직한 발전 방안이 무엇이냐 할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요구 발생시, 유성구에 직접 찾아가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성구에서 검토 의뢰한 가칭 ‘유성온천관광 재생 프로젝트’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한 내부논의가 있었으며, 이 논의 결과를 갖고 유성구 담당자에게 정책 제언을 한 바 있다.

정책협력단의 전문연구자들은 유성구의 전통성, 상징성을 특성화된 관광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제안하는 한편, 세부적인 관광사업들을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 수립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몇 가지 전략적 원칙에 대한 연구진과 유성구 공무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선, 대전시정과의 연계성, 국책사업과의 연계성을 걱정하게 확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프로젝트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역 의료관광 진흥과 관련된 지원사업 등과의 효율적인 연계전략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둘째, 이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특정 사업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 부존자원으로써 온천수를 의료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전략, 관광프로그램이 집중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고 집중적인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중하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산재한 자원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온천과 의료, 관광, 쇼핑 등 유성구를 중심으로 유성구 및 주변의 여건과 자원을 연계하되, One-Stop 형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내실 있는 축제를 통한 유성구민의 총합적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의 이벤트적이고 일회성의 행사 차원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해,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차별화된 축제를 제안했다. 이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도 상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즐길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관광재생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역발전에서 그 지역의 전통성이나 정체성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지역성조차도 사회변화라는 커다란 물결에 확고부동할 수는 없으나, 전통과 역사 속에 깊이 각인돼 있는 지역이미지는 쉽사리 변화될 수 없다.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유성구의 관광기반을 되살리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내 전문가의 지혜

를 모으는 일과 지역민의 총합적 노력이 아닐까 한다.

향후에도 유성구 정책협력단은 유성구의 현안과제 이외에도 유성구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 발전 동력이 분명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며, 어떠한 전략을 채택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한편,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타당하고, 효율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해 나갈 것이다.

⑤대덕구

산업단지서 생태학습도시로 변화

한쪽 그림속을 걷는듯 행복한 녹색바람 솔솔~

[르포]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에 가 보니...

대덕구는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생태 도시 건설`로 확정하고, `녹색생태 도시` 구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중심에 `로하스 금강 프로젝트`가 있다. 이는 대청댐-갑천합류점 구간의 친환경 주거공간, 친수공간을 이용한 휴식문화 웰빙공간을 조성하는 구의 역점 추진사업이다.

대청댐 아래쪽에 위치한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은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 수가 답보 상태였으나 최근 대덕구의 금강로하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개발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관(官)의 적극적인 시책으로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한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을 찾았다.

탁 트인 잔디광장·계족산 풍경 탄성이 절로

식물원·암석원·미로길 등 학습장으로 인기

산책로 연장·쉼터 등 웰빙공간 조성 꾀걸음

#. 도시 속 생태공원 대청공원

공원에 들어서자 탁 트인 넓은 잔디광장과 주변으로 보이는 계족산의 풍경이 어우러져 한쪽의 그림을 연상케했다.

특히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진 계족산과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 명소로 손꼽힌



▲대청댐-갑천 합류점일대에 로하스해피로드가 조성돼 인기를 끌고있다.

다.
 이곳은 최근 크랭크인 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촬영장소로 선택될 만큼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대청댐 잔디광장은 대전권에서 유일하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연생태 복원 우수마을로 지정될 정도로 국가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대청댐 잔디광장에서 출발해 호반가든까지 1518m의 ‘로하스 happy 로드’는 국내서 좀처럼 보기 힘든 수변산책로다. 이 길을 따라 걷다보면 멈추지 않고 금강과 주변을 수놓은 왕벚나무, 철쭉 등 식물들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해피로드 내 4곳의 조망데크에서 둘러본 장관은 탄성을 절로 자아내게 한다.
 잔디광장 주변에는 암석식물원을 새롭게 조성해 지난해 11월부터 내방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식물원은 금강로하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내 생태환경복원과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학습 관찰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동안 활용되지 않는 4770㎡의 면적을 암석원·그라스원·허브원·장미원·양치식물원 등 5개의 권역으로 구분, 수목·초화류 136종 2만 1729그루를 식재했다.
 이와 함께 양치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데크 143m를 설치해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종류의 식물을 관찰 할 수 있어 가족단위 내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식물원 외 아이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곳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다솜길(미로원)이다.
 다솜길은 문구를 도안삼아 금강로하스대청공원을 도안으로 퍼튼치드 향이 많고, 건강에 좋은 측백나무 300여 그루를 식재해 조성됐다.

어른 키보다 큰 나무들로 구성된 미로길을 찾아 헤매며 연신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같이 길을 찾는 부모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공원을 만든다
 대청댐 인근 개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 로하스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구는 올해 총 10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구는 오는 11월말까지 기존 대청공원~호반가든 노선을 대청공원~로하스산호빛공원까지 총 연장 8.2km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 갑천 금강합류점-유등천 합류구간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다목적 운동장 5면, 야구장 6면, 족구장 1면을 조성하고 친수계단, 쉼터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전권, 유등천 합류점부터 동구 경계구간에는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각종 나무와 화초류를 심어 새로운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그 동안 관련 규정에 가로막혀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기도 했고,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에 빠지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다”며 “하지만 구민과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돼 오늘에 이른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작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구민이 자부심 갖는 대덕구 만들 터”

[인터뷰 - 정용기 대덕구청장]



대덕구는 지난 민선4기 지역개발사업 (12개 모든 동별로 개발사업 추진), 평생학습도시, 주민참여자치(예산, 감사, 공약이행평가)의 메카, 행정혁신 등 네 가지를 기본 목표로 삼고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올해는 실질적인 민선5기가 시작되는 해로 여기에 ‘대덕구는 달라요’라는 목표 하나를 더하고자 한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첫째, 공직자가 다르다(청렴, 열정,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둘째, 주민이 다르다(대덕사

랑 및 정체성, 학습, 참여, 소통) 셋째, 도시가 다르다(도시디자인, 산호빛, 로하스프로젝트) 등이다.

이와 연계해 ‘로하스 생태·학습도시’를 구정목표로 설정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학습도시, 대청호 주변의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구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대청댐 인근 개발사업과 관련, 올해는 정부의 4대강사업과 맞물려 정부에서 금강살리기 예산과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총 102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오는 11월말까지 기존 대청공원~호반가든 노선을 대청공원~로하스 산호빛 공원까지 총 8.2km로 연장, 대전을 대표하는 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갑천 금강합류점-유등천 합류구간에 205억 원을 투입해 ▲산책로, 자전거도로 11.7km ▲다목적 운동장 5면 ▲야구장 6면 등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중리동 지역에 형성된 카페촌을 시민들이 와서 돈을 건전히 쓸 수 있는 상업거리로 만들 것이다.

이미 지난해 한남대에서 이곳에 닿는 길을 새롭게 확장한 만큼 올해 중리동 카페촌은 젊음의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를 도모할 것이다.

아울러 올해 용역예산 국비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2020년까지 국비로 1조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대전산업단지 125만㎡, 주변지역 106만㎡를 미래지향적인 복합단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올해는 민선5기 구정추진의 원년이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로하스 생태·학습도시’ 대덕구 건설의 원년이기도 하다. 3년 반이 지난 후 누가 ‘어디사냐’고 물었을 때 자부심을 갖고 ‘대덕구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구를 만들겠다. 주민들도 꼭 참여하고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깨끗하고 낮은 자세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새로운 가치 변화 적극 수용할 구민들 정체성 확립·확산 필요”

[기고 - 김홍태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민선 4기 대덕구의 ‘소외론’은 대덕발전과 도시균형발전에 있어 많은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대덕은 더 이상 대전에서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미래의 대전공동체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인식하는데 충분했다고 본다.

민선 5기 들어 대덕은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대덕구는 다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덕의 이미지를 과거 도시 외곽의 산업도시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생태·학습도시’, 청정대덕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는 미래 대덕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대덕의 정체성을 찾아 높은 구민들의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대덕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대덕의 미래상이기도 하다.

본래 대덕은 대전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회덕이 입지한 곳으로 오랜 역사와 가치 있는 문화적 자산과 산림자원, 수자원 등 자연자원이 풍부해 매력적인 지역이자 학습능력과 생태환경이 발달된 지역이었다. 특히 대청호·계족산, 대덕구를 감싸는 3대하천까지 그 동안 장애물로 여겨졌던 자연환경이 이제부터는 대덕발전 및 이미지 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구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덕의 이미지는 변화하고 있었다. 과거 대덕구의 이미지는 산업도시 및 교통·물류도시에서 미래 대덕하면 연상되는 것은 대청호(50.6%), 계족산(19.2%)이었으며, 대덕의 이미지는 물(56.8%), 숲(22.7%)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대덕의 이미지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여유를 갖는 구민들의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대덕은 이미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평생 배우고 익히면서 서로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평생학습도시 대덕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사회통합의 증진이다. 이를 통해 미래 경쟁력 있는 대덕을 만드려고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잘 알려진 독일의 ‘푸라이부르크’나, 브라질의 ‘꾸리찌바’, 일본의 ‘미나타타’ 등이 오늘날 생태도시로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인 행정지원과 소통이 뒷받침이 있었음을 대덕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덕구가 도시 이미지를 산업도시에서 학습·생태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덕의 역량과 장점을 극대화해 새로운 가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민들의 정체성 확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대덕정체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대덕정체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덕의 또 하나의 이미지인 학습도시가 실현될 수 있다.

미래 대덕이 생태도시로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는 이미 도시발전 시스템이 광역화, 네트워크화 된 시점에서 공간적 범위를 대전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인접한 청원·청주권과 세종시 등 주변지역과의 생태적 연계를 주도해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계족산, 대청호, 금강을 생태기능의 중추 거점으로 하는 ‘대덕-세종시간 광역녹색회랑벨트’

구축은 대덕구가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발전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끝으로 대덕이 학습·생태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민주도형 생태도시 추진이 중요하다. 선진도시에서 보듯이 학습·생태도시 조성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원하고 의견을 공유해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학습·생태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학습·생태도시에 대해 상시적으로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형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행정적으로는 구와 시에서는 주민주도형 조직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보조와 학습·생태문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⑥대덕특구

국내최고 대덕특구를 지키자

국가·지역발전의 '심장' 힘찬 백박소리 작아질라

[르포] '한국과학의 메카' 대덕특구에 가보니...

부존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국부는 몇 가지 분야에서 창출된다. 그 중 하나가 과학기술이다. 최첨단 IT대국의 면모에서 입증됐듯이 과학기술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만큼 비중이 크다. 그 근간인 기초과학분야의 발전이 그래서 중요하다 과학계는 입을 모은다. 대덕특구는 우리나라 R&D허브로서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나라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정도로 과학기술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 실리콘벨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대덕특구가 있다. 과학의 메카 대덕특구를 찾았다.

눈부신 발전 거듭 R&D단지 성공모델 우뚝

광주·대구에 특구 추가지정으로 정체성 위기

과학벨트 표류 충격으로 속 시커멓게 타들어

대덕특구의 역사는 흔히 말하는 '격동의 70년대'부터 시작됐다. 대전 유성구에 건설된 최초 대덕연구단지는 기초과학 및 특수분야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1973년에 기본 계획이 수립돼 1978년부터 연구기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지난 2005년에는 국내 유일의 특구로 출범해 지금은 전국 박사급 연구원 7만 6480명 중 10%에 달하는 7661명이 대덕특구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과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구 출범 5년 만에 코스닥 등록 기업이 11개에서 23개로 늘었다. 연구소기업 20곳, 첨단 기술기업 84곳이 뿌리를 내렸다는 점 등이 대덕특구의 위상을 대변한다.

그 동안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며 성공적인 과학연구단지 모델로 자리매김했고 한 걸음 나아



▲대덕특구 전경.

가 전 세계에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전력 질주한 대덕특구지만 걸만 화려할 뿐 속은 시커멓게 타고 있다는 느낌이다.

펼쳐진 특구의 위상은 차지고고서라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광주, 대구 등을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하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구 내 한 과학자는 “광주와 대구의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로 심란하다”며 “대덕특구와 차별화된 연구개발특구가 다른 지역에 추가로 생겨 과학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장점도 있지만, 대덕특구가 완벽히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역량이 분산되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혼란스러운 면도 있다”고 푸념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7일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안과 광주·대구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대덕특구는 추가 지정된 광주·대구 특구본부를 이끌 혁신클러스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대덕특구의 위기감을 거론하는 의견이 적잖다.

과학자의 걱정대로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대덕특구에 정부의 분산정책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자칫 대덕특구가 정체성을 잃은 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올 대덕특구 예산이 당초 752억 원의 절반 수준인 436억 원만 책정된 것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과학벨트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기초과학연구원은 총 50개 연구단에 각 50명씩 모두 3000명(지원인력 500명 포함)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과학벨트에 웬 타령이나 할 지 모르나 또 하나의 정부출연연 탄생으로 인해 역할분담, 연구인력 수급, 상대적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거니와 대통령의 거급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에 불모로 잡혀 충청권 입지 확정은커녕 우왕좌왕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정정훈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장은 “과학과 비즈니스가 합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과학기술 정책이 지역과 정치적 논리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더욱이 과학벨트 내 기초과학 연구원은 기존의 정부출연연과 중복될 우려가 크다. 연구개발 지원비도 한정된 만큼 기존 정부출연연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회장은 “지역과 정치적 논의를 배제한 채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려,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크고 국가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잘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대덕특구의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기고 -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연연구실장]



대전의 혁신환경을 둘러싸고 최근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를 둘러싼 논의와 연구개발특구의 타 지역으로의 확대지정 문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입지해 있는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 방안 검토 등의 움직임이 최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둘러싼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상의 움직임들은 대전의 혁신환경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가혁신체계 내에서 주요 지식공급지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추격기 기술혁신 패러다임 하에서 민간부문의 기술능력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미 선진국에서 개발돼 있으나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공공적 성격을 지닌 시스템 기술의 개발이나 원천 기술의 공동학습을 통한 기업 학습의 장 마련 등이 그간 출연연구기관이 담당해 온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산업 기술개발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이들이 밀집해 있는 대덕특구에 두 가지 방향에서 새로운 기능과 책무가 요청되고 있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프론티어 제품군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추격형 패턴에 의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획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창조형 기술혁신을 위한 원천기술개발이나 기초연구능력 확대 등의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기초연구기반의 확대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원천 연구역량 확대와 이에 근거한 연구성과 창출이 대덕특구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최근 2000년대 후반 이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규모 기술이전 성공사례들은 바로 이러한 기초·원천 연구성과에 기반한 사업화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원천 연구성과 사업화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이 풍부한 곳이라는 의미이다.

대덕특구에 요청되고 있는 두 번째 새로운 책무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 및 지역기반 기업과의 연계 확대라는 측면이다. 대덕특구의 목적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식생산과 확산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전 지역에 한정된 지역기반 기업과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밀착된 상호작용이 용이한 대전 지역 기업과의 연계 모델을 생산해 전국적으로 이러한 모델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요약하면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원천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창조형 혁신클러스터 모델의 구축이라는 과제와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역 수요와의 상호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새로운 도전적 목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창조형 혁신클러스터 핵

심지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덕은 기초-응용-사업화 연계 체계 구축과 글로벌 기술사업화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초-응용-사업화 연계의 확충이다. 이미 대덕 내에 기초-응용-사업화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만 각 기능단위간 연계 고리 형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기초, 응용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개연구 기능 등은 대전이 창조형 혁신클러스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확충해야 하는 기능 중 하나이다. 둘째, 기술사업화 기반 확충이다. 대덕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사업화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를 위한 소프트 기반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대덕특구에서 생산되는 초기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전문금융시스템의 정착,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공동지주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사업화 제도의 활성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창조형 기술사업화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다. 창조형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지구로서 통합적 거버넌스가 대전에 자리 잡게 되면 첫째, 기초-응용연구 연계가 용이해짐에 따라 연구성과의 풀이 증가하고 중개연구기관 설립 등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둘째, 전국적 단위에서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의 기획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내 기술 사업화 기회가 증가할 수 있다. 셋째, 공공부문 연구성과 사업화 편당의 핵심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기술사업화 인프라가 정착될 수 있다. 넷째, 클러스터 모델을 전국적, 글로벌 차원에서 확산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창조형 혁신단지 모델 수출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 새로운 책무인 지역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역 차원에서 연계 고리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이제까지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은 일부 창업단계와 제품화, 기술지도 및 경영지원 단계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덕특구 연구성과의 사업화 진작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 연구기획 단계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보완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예보제와 더불어 지역 차원의 현재 수요 및 잠재적 수요 발굴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적으로는 지자체 산하 지역혁신 허브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밀착형 과학기술 정책의 기획과 네트워킹, 인프라 지원, 기술사업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 사업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는 허브기관의 기획이 병행돼야 한다.